

## 아브라함 카이퍼의 노동문제관 : ‘우리의 강령’과 ‘수공노동’을 중심으로\*

이 명 현\*\*

### 논문초록

이 연구는 카이퍼가 노동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가를, 그의 저작과 연설문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가 제시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중요 요소인 영역주권론이 노동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과 대안 제시에 중요한 틀로 작용하였음을 보았다. 우선, 그는 노동, 노동자들의 삶과 그 조건, 그들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노동법전의 제정과, 자본과 분리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의 영역주권론의 중요한 요소인 ‘국가의 한정된 권능’이라는 개념은 노동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하향적, 설계주의적, 국가 개입 방식이 아닌 상향적, 제도적, 계급 간 자발적 타협의 방식을 선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영역주권론 내에서 국가가 가지는 기능, 즉 영역 간 침해의 방지와 영역별 주권 발휘 보호를 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대표’의 원리가 제시되었다. 그 원리를 구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상향적 선출에 의해 조직되는 지역단위 노동회의소를 및 전국적 일반 노동회의소의 설립과, 각 이익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기존의 상원을 대체하는 이해관계원의 설립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그의 구상은 당대에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2차 대전 이후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북구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체제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영역주권론적 사고는 인간 공동체가 풀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시장이나 국가나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어: 카이퍼, 노동문제, 영역주권론, 노동회의소, 코포라티즘

---

\* 이 논문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인천대학교로부터 연구년을 받아 캐나다 브리티시 컬롬비아 대학에 방문교수로 있는 기간 동안 준비되었다. 두 학교에게 감사한다. 또한 그 기간에 필자에게 네덜란드어 읽기를 가르쳐준 Bylenga씨에게 감사드린다.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2011년 7월 22일 접수, 9월 9일 수정, 9월 17일 게재확정.

## I. 서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년~1920년)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전거(典據)가 되는 인물이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 세계관의 제시와 현실정치 양쪽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정력적인 언론활동, 저작, 강연을 통하여 개혁적 기독교 세계관을 체계화하였고, 다른 한편 현실정치가로서 반혁명당(反革命黨: ARP)을 창당(1879)하고 지도하여 집권세력으로 성장시켰으며 본인이 총리로서 집권(1901~1905)하기까지 하였다<sup>1)</sup>. 그의 사후에도 반혁명당은 독일 나치 점령기를 제외하고 여러 차례, 장기에 걸쳐 집권연정에 참여하였고 2차 대전 후에도 현실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sup>2)</sup>.

이 글은 카이퍼가 자신의 시대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던 노동문제를 어떻게 인식했고, 그 해결책으로 어떤 정책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그가 구축한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피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그의 세계관 내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고 있는 영역주권론이 노동문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카이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사상적 체계로서의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론적, 신학적 이해에 집중해 온 것을 보완하여, 그러한 세계관이 그가 살았던 시대의 구체적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제시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를 살피려는 시도이다. 국내의 경우 카이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그의 일반은총론을 중심으로 신학적 논의를 검토하거나, 사회적 참여와 관련한 그의 기본적 입장들을 검토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들이었다(예들 들어 차영배(1985), 정광덕(2000), 김현수(2004)는 각각 그의 신학적 체계에 대한 고찰을 주로 하고 있고, 민중기(1997)는 정치선교라는 관점에서 카이퍼의 정치철학과 활동의 대강을 살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카이퍼 이해에, 또는 더 나아가, 세계관 연구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영어권의 신학계에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즉, 카이퍼의 세계관 체계, 그것이 형성되게 되

1) 카이퍼의 전기로는 정성구(2010), Koch(2006), McGoldrick(2000), Langley(1984), Vanden Berg(1978) 등이 있다.

2) 최근까지 집권당이었던 기민당(CDA: Christen-Democratisch Appèl)도, 1980년 반혁명당, 기독교연합(CHU), 카톨릭당(KVP)의 합당으로 이루어진, 말하자면 반혁명당의 후신이라 할 수 있다.

는 배경에 대한 연구, 그것이 오늘날 구미사회(특히 미국)의 중요한 현실문제에 대하여 갖는 함의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루어졌다<sup>3)</sup>. 그러나 카이퍼 당대의 맥락에서 그의 세계관이 적극적으로 현실문제에 대한 정책제시로 어떻게 이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기독교적 세계관에 무관심한 ‘세속’경제사의 영역에서는 카이퍼의 정치활동이 네덜란드가 당시 직면하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네덜란드가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발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밝히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카이퍼의 세계관과 그의 정책적 제안 사이의 관련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관심하다. 이러한 연구의 상황은 개혁주의 전통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공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1)성경과 개혁주의 전통이 카이퍼의 세계관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2) 그의 세계관이 그가 정치가로서 제시하고 추진했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3)그러한 정책이 네덜란드의 현실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쇄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1)의 내용과 (3)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2)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 연구는 바로 이것을 보충하려는 작은 시도라 할 수 있다.

카이퍼가 현실정치가로서 직면했던 중요한 정치, 경제적 문제들로는 학교 및 교육문제, 투표권의 확대 문제, 노동문제, 그리고 외교문제(남아프리카, 식민지 등)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중 노동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노동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까닭은, 우선 카이퍼 자신이 말년에 ‘교육문제는 이제 해결되었고 노동문제가 미래의 문제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De Gaay Fortman, 1956: 12), 노동문제가 그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들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에도 급속한 산업화를 거쳐온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의 문제, 소득 양극화 등 넓은 의미의 노동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예를 들어 Heslam(1998)은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의’의 시대적 배경과 지성사적 배경을, Lugo(2000)는 민주주의, 다원화된 사회, 세계화라는 현대적 맥락 속에서의 카이퍼의 의미를, Bolt(2001)는 미국적 정치상황 속에서 카이퍼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4) 예를 들어 Wintle(2000), van Zanden and van Riel (2004)는 카이퍼를 정치적 혁신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라고 파악하고 그의 활동이 네덜란드가 당시 직면하고 있었던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들을 살피기 위해 주로 그가 쓴 반혁명당의 정강해설책자인 “우리의 정강(Ons Program)” 중 사회문제에 대한 부분과 노동문제에 대한 책자인 “수공노동자(Handenarbeid)”, 그리고 관련된 그의 의회연설을 검토할 것이다. 이 저작과 연설은 1901년 그가 총리로 집권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 그가 발표한 가장 중요한 문건들로, 노동문제에 대한 그의 사상의 ‘원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총리재직기간, 그리고 그 후 원로정치인으로서 활동한 시기에도 노동문제에 대해 많은 발언과 활동을 하였으나, 이 시기의 그 사상의 ‘변용’과 실천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기회로 미룬다.

이를 위해 이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카이퍼 시대 네덜란드의 노동문제 상황을 개관하고, 3절에서는 검토의 주 대상이 되는 “우리의 정강”과 “수공노동자”의 문헌배경을 소개하고, 4절에서는 주로 “우리의 정강”을 중심으로 카이퍼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균형과 보호’의 원리를 검토하고 5절에서는 주로 “수공노동자”를 중심으로 그가 제시한 ‘노동회의소’안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4절과 5절의 논의 중에서 그의 인식이나 대안이 그의 세계관 체계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6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카이퍼의 사고와 대안이 갖는 함의를 살필 것이다.

## II. 카이퍼 시대의 노동문제

네덜란드 경제는 17세기 세계무역을 지배하면서 황금기를 구가하였으나, 18세기에 정체상태에 처해있었고 산업화에 있어서도 19세 초반까지 영국, 벨기에, 독일 등 인근 국가에 뒤쳐져 있었다(주경철(2003)).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래 산업화가 진전되기 시작하여 카이퍼가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19세기 말엽, 20세기 초에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 계급도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산업화는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는 완만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취업자의 숫자가 인구의 증가와 발맞추어 늘어나고 있었으며,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1807년 43%에서 1899년 30%수준으로 감소) 제조업(같은 기간 19%에서 24%로 증가)과 건축, 상업 분야 종사자 비중이 증대하고 있었다<sup>5)</sup>.

기계화도 진전되어 증기기관 수가 1860년 819대에서 1890년 3,925대로 크게 증가하였다(Wintle, 2000: 131). 기업의 규모도 증가하여 1825년에는 숙련노동자 중 10인 이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96%였지만, 그 비율이 1889년 75%, 1909년에는 55%로 떨어지게 된다(Wintle, 2000: 77).

이러한 산업화는 정치, 사회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첫째, 산업화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조건 속에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에 처하게 되었으며, 유아노동과 장시간 여성노동도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은 정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유아노동과 여성의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입법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지만 1890년대 이전까지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였다(Wintle, 2000: 67ff). 둘째,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기반한 급진적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이들과 기존 엘리트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사회전체가 불안해져갔다. 산업화가 네덜란드보다 앞서 있었던 인접국 벨기에에서는 1886년 봄 노동조건의 개선과 관련한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노동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뱀장어 반란(palingoproer)<sup>6)</sup>’이 일어나는 등 사회 불안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1870년대 중반 이래의 불황기 동안의 실업 현상, 탈숙련화 및 프롤레타리아화의 진전, 대규모 기업과 공장이 출현이라는 객관적 조건 위에, 외국에서의 혁명이테올로기가 유입되면서 1880년대가 들어서는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적 운동과 정당이 출현하였다(Wintle, 2000: 305ff; Hansen and Prosper, 1976). 1881년 사회민주주의 연맹(Sociaal-Democratische Bond; SDB)이 결성되었고, 1894년에는 거기서 분파된 사회민주주의 노동당(Sociaal-Democratische Arbeiderspartij; SDAP)이 결성되었다. 이 중 전자는 도멜라 니우엔호이스(Domela Nieuwenhuis)의 지도하에 급진화, 소수화 되었고, 후자는 보통선거권 요구에 집중하면서 의회주의적 성향을 띠었다. 이 두 정당과 관련된 노조조직으로 각각, 1893년 전국노동국(Nationaal Arbeids-Secretariat:NAS)과 1905년 네덜란드 노조연맹(Nederland Verbond van Vakverenigingen:NVV)이 결성되었다(Kossmann, 1978; Hansen

5) 자세한 수치는 Wintle, 2000: 78-79를 참조

6) 1886년 암스테르담에서 당시 서민들 사이에 인기를 끌던 뱀장어를 쫓는 놀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군중이 충돌하여 26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체포된 사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네덜란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공권력에 대한 혐오와 사회불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Kossmann, 1978: 316).

and Prosper, 1976)<sup>7)</sup>.

### III. 카이퍼의 노동문제 관련 저작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카이퍼 시대에는 노동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었으므로, 현실정치가였던 카이퍼와 반혁명당에게도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였다. 카이퍼가 노동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대처하려 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차적 저작 혹은 문헌들로는 ‘우리의 강령’(Ons program), ‘수공노동’(Handenarbeid), ‘사회문제와 기독교’<sup>8)</sup>, 주로 ‘의회연설집’(parlamentarische Redevoeringen)에 수록된 그의 연설들을 들 수 있다<sup>9)</sup>. 이 상을 포함하여 카이퍼가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남긴 저작들이나 연설들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입법의 제안관련 하원연설(1874)
- 『우리의 강령』(1879)
- 『수공노동자』(1889)
- 기독교 사회문제 회의 주최(1891) 및 개회 연설(『사회문제와 기독교』)
- 『그리스도와 사회적 필요(De Christus en de Sociale noden(1895))』
- 노동회의소 설립법안에 대한 하원연설(1897)(의회연설집(Redevoeringen 이하 RV)에 수록)
-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하원연설(1901-1902 RV)
- 노동자의 상태(Arbeidstoestand), 노동법(Arbeidswet), 노동문제(Arbeidsquaesties) 등에 대한 하원연설(1902-1903 RV)

---

7)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카이퍼는 새롭게 출현한 사회주의 세력의 급진적 사회변혁 요구와 그에 맞서는 기독교권층 간의 대결이 사회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8) 이 연설문은 일찍이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 중 최신의 것인 Skillen(1991)의 영역본을 조계광(2005)이 ‘기독교와 사회문제’라는 제목으로 국역하였다.

9) 위의 저술들 중에서 ‘우리의 강령’은 극히 일부만 Skillen and McCarthy(1991)에 영역되어 있고, ‘수공노동’은 Bratt(1998)에 영역되어 있으며, 의회연설집은 영역되어 있지 않다. 이 세 저작 모두 한국어 번역본은 없다.

- 1903년 파업대처와 입법을 둘러싼 연설들
-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대우(Arbeidsmisstanden)에 대한 하원 연설(1904 RV)
- 『반혁명당의 정치학』(1917)

카이퍼의 노동문제 또는 계급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사상을 알려주는 저작으로 우리나라와 영어권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사회문제와 기독교’(Kuyper, 1891)이다. 이것은 네덜란드 사회에서 노동자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노동자 및 자본가가 연대하여 결성한 조직인 파트리모니움(Patrimonium)이 개최한 1차 기독교 사회 회의(Eerste Christelijk Sociaal Congres)에서 카이퍼가 행한 개회 연설문이다. 이 연설문은 자본주의 진전에 따른 사회계층간의 갈등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그 갈등 해결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의 원칙, 그리고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다. 이 연설문은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참여 방식을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시대를 넘어서 읽혀져 오고 있는 명문(名文)이지만, 국가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대회의 개회연설이라는 속성상,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의 정책적 대안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언급하는 다른 저작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sup>10)</sup>.

우선, ‘우리의 강령’(Ons program, Kuyper, 1879)은 반혁명당의 강령에 대한 해설서로, 원래 카이퍼가 1872년 이래 편집장으로 주관하고 있던 개혁주의 일간신문 ‘슈탄다르(De Standaard)’에 다년간에 걸쳐 게재된 논설들을 1879년 책자 형식으로 출간한 것이다. 반혁명당의 강령 자체는 21 개조로 이루어진 간단한 것이지만<sup>11)</sup>, 이에 대한 해설인 ‘우리의 강령’은 초판은 1307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었으며, 2판(1880년)부터는 약 500쪽 정도로 요약되었다. 카이퍼는 이 해설서가 당의 강령에 대한 최종적

10) 카이퍼 저작들은 [www.archive.org](http://www.archive.org)에서 대부분 그 원문을 볼 수 있다. 필자의 요청으로 소중한 자료들을 이 사이트에 공개해 준 프린스턴 신학교 카이퍼 센터, 특히 Clifford Anderson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11) 반혁명당 강령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조: 계승 전통과 현재, 2조: 주권적 권위의 근원, 3조: 국가 권위와 하나님의 위임, 4조: 국가와 교회, 5조: 서약과 일요일, 6조: 왕정, 7조: 1848년 헌법, 8조: 의회와 국민의 영향력, 선거, 9조: 예산, 10조: 자치, 11조: 선거권, 12조: 국가와 (고등)교육, 13조: 사법, 14조: 풍속, 15조: 공중위생, 16조: 국가재정, 조세, 17조: 독립유지를 위한 노력, 18조: 식민지 정책, 19조: 사회문제 20조: 국가교회 반대, 21조: 당의 독자성과 (선거)연대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후에도 1896년 4판 까지 발행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혁명당원 및 그 지지 세력은 물론, 다른 정치세력들에게도 반혁명당의 기본적 방침을 명확히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저작이다. 또한, 카이퍼가 총리를 역임(1901~1905년)하고 나서 원로정치인의 반열에 들었던 1916년에 반혁명당의 정치적 노선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저술한, 상하권 각각 약 700쪽에 달하는 ‘반혁명당의 정치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Kuyper(1917))이 ‘우리의 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도, 1879년 출간되었던 ‘우리의 강령’은 카이퍼 자신이 정치가로서의 경력 전체에 걸쳐 중시한 원칙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작 중 강령 19조 ‘사회문제(sociale quaestie)’에 대한 해설부분이 노동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로, ‘수공노동’ 역시 1889년 2월에 노동문제에 대하여 카이퍼가 역시 스타다르에 연재했던 일련의 논설들을 묶어서 같은 해에 발행한 소책자이며, Bratt(1998)에 의해 처음으로 영역되었다. 1880년대 초반의 불황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이 고조되고 사회가 불안에 빠진 상황에서 카이퍼가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글이다 (Bratt, 1999).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의 노동문제에 대한 시각이 가장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카이퍼의 의회 연설문집(Redevoeringen)은 1894년부터 1905년까지 그가 하원의원, 총리, 또는 상원의원으로 행했던 연설의 내용을 모은 것이며 역시 우리말이나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이 연설문집에는 각 연설의 주제가 되는 핵심문제에 대한 카이퍼의 생각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저술과 같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으나, 그 당시의 구체적 정치적 상황, 다른 당 의원과의 논리적 공방 혹은 설전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현장감이 살아있는 일차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노동문제는 교육문제와 더불어 그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으므로 이 연설문집에는 노동문제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897년 자유주의 정당 집권 시기에 정부가 벨기에의 전례를 ‘복사’하여(Kossmann, 1978: 501) 노동회의소 설치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였을 때, 그가 행한 연설은 노동문제에 대한 그의 사상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 IV. ‘우리의 강령’: 균형과 보호

카이퍼는 ‘우리의 강령’ 제 20장에서 이른바 ‘사회문제’(sociale qeestie)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해결의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sup>12)</sup>. 이 20장은 강령 19조에 대한 해설이다. 강령 19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Kuyper, 1879: 1052).

당은 우리의 입법을 통해서도 서로 다른 사회계층들 간의 관계가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응하도록 현재에 비하여 개선된 방식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Zij erkent de noodzakelgkheid om ook door middel van onze wetgeving, beter dan thans, er toe mede te werken, dat de verhouding tusschen de verschillende maatschappelijke standen zooveel doenlijk beantwoorde aan de eischen van Gods Woord.

여기서 ‘사회문제’라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근거를 노동에 둔 계층과 정신적 혹은 재정적 우위에 둔 계층 사이의 갈등문제(Kuyper, 1879: 1052), 즉 오늘날의 용어로는 노동문제 또는 계급갈등으로 부를 수 있는 문제이다. 그가 보기에 당시 네덜란드 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치세력들(한편의 사민주의자들과 다른 한편의 반동 및 기득권층(reactionairen en Satisfaits))은 ‘전부 아니면 무’라는 식으로 한쪽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폭발’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 카이퍼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의식의 성장, 기계화에 따른 탈숙련화, 인구증가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카이퍼는 당시 치료책으로 흔히 제시되었던 다른 정책들을 비판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빈곤문제’와 ‘노동문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당시 자유주의자들과 종교단체들이 행하고 있던 온정적 구호 및 계몽활동(무료급식, 가정방문, 성경독회 등)의 좋은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즉, 그는 사회적 운동의 주된 요인은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인간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자신에게 일이 주어질 수 있는 가를 묻는, 즉 그런 조건을 요구하는 건강한 임금노동자’라고 밝히고 있다(Kuyper, 1879: 1056). 다시 말해서, 그는 계급갈등의 문제는 자선이나 개인적 접근 방식으로는

12) 이 내용은 스탠다르에 1879년 2월에 3회에 걸쳐 게재되었던 것이다.

해결할 수 없으며, 제도적이고 구조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그가 이하에서 설명되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문제’를 명확히 인식한 카이퍼는 그 해결을 위한 방도로 세 가지, 즉 하나님 말씀으로의 복귀, 정치적 균형의 창출, 노동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의 복귀’는 사회문제 해결의 기준<sup>13)</sup>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원칙적 언명(言明)이라고 볼 수 있고 카이퍼도 이 점을 간략히 언급하는데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방도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 1. 정치적 균형의 창출(herstel van het politieke evenwicht)

카이퍼는 계급갈등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도로서 우선, 정치적 균형의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균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한 다음, 그것을 노사 및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에 적용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1) 정치적 균형의 필요성

그는 법률과 규정을 통하여 사회의 한 집단에는 유리하고 다른 집단에는 불리하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것을 제어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는 것을 정치적 균형의 달성이라고 보고 있다. 그 필요성을 그는 3단계로 논의하는데 우선, 성경의 구약법에서 사회내의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균형달성을 위한 ‘사회적 입법’(sociale wetgeving)의 전거(典據)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고리대, 저당, 채무권, 일일고용노동자, 이삭줍기, 희년규정, 십일조 등의 규정을 열거하면서, 이 규정들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관계를, 방임했을 때와는 다르게 바꾸어 놓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법들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균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구약법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균형 잡힌 사회에 대한 본능적 회구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 또한, 한발 더 물러서서 그러한 회구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자라

13) 카이퍼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성경상의 원칙으로 자비(barmhartigheid)와 순복(onderwerping)을 강조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문제를 입법부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많은 현실 입법들이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는 개혁적 기독교인뿐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신앙적,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회집단들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균형’이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그 위에서 그 다음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고 있다.

## (2) 균형 창출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정치적 균형 창출의 방안을 논하기 전에 카이퍼는 사회적 갈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그는 국가, 입법의 역할은 ‘규율’(regeling)이 아니라 ‘보호’(bescherming)’로 보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강함’을 가진 두 계급을 각각을 다른 쪽의 ‘강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보고 있다. 이때 상류층의 강함은 자본, 지식이며 하류층의 강함은 수적 우세, 육체적 힘, 교활함(sluwheid)이다<sup>14</sup>. 카이퍼는 ‘모든 것을 다하려는 국가(albemoeiend Staat)의 규율방식(regelingsmanie)’과 ‘정의를 부여하는 국가(rechtverleenend Overheit)의 보호의무(beschermingsplicht)’를 구분해야 함을 역설한다. 전자의 노선을 추구하는 정치가는 사회를 자신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틀에 맞추어 재구조(再鑄造: omgieten)하려고 하지만, 카이퍼가 지지하는 ‘보호를 부여하려는 국가’는 그 역할을 훨씬 제한적으로 수행한다고 본다. 즉, 그러한 억압에 대한 불평(klacht)이 있는 연후에만, 그리고 그 힘의 오용의 범위만큼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주의하면서 개입한다고 본다.

이 같은 국가관은 그의 영역주권(souveriniteit in eigen kring: sphere sovereignty)론에 기초한 것이다. 영역주권론은 ‘우리의 강령’의 2장에 제시된 바 있었고, 1880년 카이퍼의 자유대학의 개교기념 연설의 주제였으며(Kuyper, 1880), 그 후 1898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행한 칼빈주의 강연(Kuyper, 2007)에서도 상세히 제시되었다. 제목 자체가 ‘영역주권’이었던 자유대학 개교기념 연설에서 제시된 그의 영역주권론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주권이 인간에게 위임될 때에는 여러 영역

14) 카이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립하는 두 계층을 지칭할 때 노동자(arbeider)와 자본가(kapitalis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상류층(de hogere klasse), 하류층(de lagere klass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으로 나누어진다', '각 영역은 고유의 주권을 갖게 되는데,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영역 내부의 개인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라는 영역이 존재한다', '국가는 이와 같은 고유의 임무를 넘어서서 각 영역 고유의 주권 위에 군림하려해서는 안 된다'.

즉, 카이퍼는 이와 같은 영역주권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국가의 역할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가 자본과 노동, 두 계급이 관계를 맺는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되며, 다만 그 중 한쪽이 자신의 강점을 이용하여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침해할 때, 그것을 제어하는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사고는 다음에 검토하는 '수공노동자'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후, 카이퍼는, 당시 네덜란드 현실의 여러 법령들은 전반적으로 강자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고 폭넓은 영역<sup>15)</sup>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 (3) 해결방안

그렇다면, 당면한 계급갈등이라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에서 카이퍼는 급격한 방식의 개혁을 반대하고, 점진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점진적 방식의 핵심은 현재의 정치적 대표체계가 있어서 배제된 계층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een doen meespreken van het nu uitgesloten bestanddeel in de vertegenwoordiging der natie)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투표권(stemrecht)의 확대였다.

당시 네덜란드는 다른 중요한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참정권(suffrage)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전체 성인 남성 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1870년에는 11%, 1890년에도 27%에 불과했다<sup>16)</sup> 이것은 다른 주요국들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었다. 같은 시점에 영국은 32%에서 62%로, 독일은 80%에서 92%로, 프랑스도 87%에서

15) 사법제도 관련법(rechterlijke wetten), 부동산등록법, 병역법, 빈민법, 교육법규제, 교회관련, 주류관련, 항해, 자본이동관련, 수출입관련, 유가증권시장 등이다.

16) 네덜란드의 1848년 헌법은 재산의 하한선(cens)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다. '우리의 강령'이 발표되지 8년 후의 1887년 개헌은 재산하한제도를 철폐하였으나 23세 이상의 남성들 중 '능력과 부(prosperity)의 증명'을 보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 정하였다. 이 조항을 구체화한 새 선거법은 1896년에야 제정되었다(Kossmann, 1978: 351 ff).

92%로 증가하였다(van Zanden and van Riel, 2004: 245 에서 재인용). 이것은 네덜란드,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급진적 혁명을 경험한 바가 없었고, 당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자유주의 정당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엘리트, 부유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이퍼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발언권이 중요함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Kuyper, 1879: 1064).

피상적으로든 본질적으로든, 불리한 조건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기회를 허락해 주기만 하라. 즉, 그들의 복지에 출혈을 가져오는 상처에 스스로의 손가락을 올려 놓을 기회를,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삶의 영역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시의회 회의장에서 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러면 서서히, 병들었던 부분이 저절로 고쳐지게 된다.

Geef aan de nu; schijnbar or wezenlijk; benadeelden, slechts de gelegenheid om zelf voor hun rechten op te komen; op de wonde die aan hun welstand bloedt, zelf den vinger te leggen; en aan het empieteeren op het hun onmisbare levensterrein in de raadszaal weerstand te bieden; en van lieverlee wordt, al wat ziek was, van zelf gezond.

이 같은 투표권의 필요성을 카이퍼는 사회구조에 대한 그의 역사적 관점에서 도출하고 있다. 즉 이전에 고용주와 피용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던 시대에는 피용자의 이해를 따로 대표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 당대에는 그 양자의 이해관계가 분리되었으므로(uiteenraken), 노동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여 그들의 이해를 대표하게 할 필요가 생겼다고 본다. 이러한 사고는 19세기의 다른 기독교 또는 천주교 사회사상이나 운동의 경향과 구분된다. 즉, 후자는 많은 경우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대립을 부정하고, 그 둘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조화시키려고 했던 것에 비해<sup>17)</sup>, 카이퍼는 양자가 이해가 일치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권 확대의 구체적 방식에 있어서는 카이퍼는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요구하던 보통선거권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누적표(cumulatieve stem)<sup>18)</sup>를 가미

17) 예컨대 교황 레오 13세가 von Ketteler 등 천주교 사회운동가들의 견해를 집약하여 1891년 노동문제에 대해 발표한 회칙(回勅) Rerum Novarum의 19조는 다음과 같다. “The great mistake made in regard to the matter now under consideration is to take up with the notion that class is naturally hostile to class, and that the wealthy and the working men are intended by nature to live in mutual conflict. So irrational and so false is this view that the direct contrary is the truth.”(강조 필자)

한 가족투표권(보다 정확히는 모든 남성가장의 투표권) 제도를 주장한다(Kuyper, 1879: 1065).

이러한 고려에 따라 우리는 길드원칙을 선택하며, (이것은 협동체적 국가로 이끌게 된다) 그리고 정치적 국가와 관련해서는 누적표 방식을 추가한 가족단위 투표권을 선택하게 된다

Uit dien hoofde kozen wij dan ook voor het gildestelsel, leidende tot corporatieve Staten; en voor het familiestemrecht, met cumulatieve stem, voor de politieke Staten.

이같이 그가 보통선거권을 주장하지 않고 가족단위의 선거권을 주장한 것은, 그와 반혁명당이, 선거권 확대에 미온적이었던 주류 보수(자유주의) 세력보다는 ‘진보적’(모든 가족에게 투표권을 부여)이었고, 조속한 보통선거권의 도입을 주장한 사회주의 세력보다는 분명히 ‘보수적’인 입장(가족 단위 투표권 및 가장의 자질에 따른 표수의 차별, 즉 평등투표의 거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러한 입장은 계급간의 정치적 균형을 추구하는 그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현 상황과 같이 소유계층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정치적 힘(대표권)의 배분도 불합리하지만, 계급, 계층 간의 정치적 힘의 관계가,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하층민으로의 투표권 확대에 의해, 현상황과 정반대로 급격히 역전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세력 간의 균형을 추구하려 했던 것이다.

요컨대 카이퍼는 계급갈등의 해결책을 사전에 정형화된 개혁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찾지 않고 하위 계층이 정치적 과정에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서 찾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제도나 법규의 개혁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를 제시하기보다는, 그 불균형을 국가를 통해 완화하기 위해 약자계층에게 정치적 발언권 부여(doen meespreken)한다는 제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sup>19)</sup>.

이것은 그가 자신의 세계관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영역주권론으로부터 구체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출해내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언급

---

18)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는 표 이외에 그의 자질(qualiteiten)에 따라 추가적으로 행사하는 표들(Kuyper, 1879: 418).

19) 이 같은 방식은 그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때 일관되게 취하는 입장으로 아래에서 논할 수공노동자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 것처럼 국가의 역할을 영역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일방의 다른 쪽에 대한 침해를 제어하는 것을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그 제어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역들 간의 관계에 대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설계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한 영역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 3. 노동법전 도입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문제의 구체적 해결방도로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구축을 제시한 카이퍼는, 다음으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20)21)</sup> 그가 전개하고 있는 노동법전 필요성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영역의 생성과 그에 따른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 대한 그의 역사적 사고이다. 즉, 카이퍼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에는 새로운 하부 영역이 형성되며, 그것이 복잡해지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관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관습을 공식화하거나 관습보다 더 정교화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그의 논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그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대체로 ‘생산’과 ‘유통’이라 볼 수 있는 두 부문으로 구분 지어져 있다고 본다(Kuyper, 1879: 1066).

하나는 현존하는 사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준비된 것을 사용자의 영역 안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다.

Een eerste, om de voorhanden stof in bruikbaren toestand te brengen; en een andere, om

20) 카이퍼는 일찍이 1894년 의회에서 행한 한 연설 중, 한 부분에서 노동법전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연설문은 De Gaay Fortman(1956)에 수록되어 있다. 연설의 내용은 간단한 역사적 고찰에 기초한 필요성의 제기, 반혁명당의 신앙고백 측면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당성 옹호, 그리고 카톨릭과 보수정파에 대한 지지 호소이다. 노동법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체계적 논증이나, 거기에 답을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21) 카이퍼가 주장한 노동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전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며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Bratt, 1998: 232쪽). 1889년 반혁명당과 카톨릭당 집권기에 ‘노동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여성과 아동노동에 대한 규정이었다(Kossmann, 1978: 354).

het aldus bereide onder hat bereik te brengen van den gebruike

카이퍼는 이 종류의 활동(bezigheid)이 서로 다른 원리(상업의 원리와 노동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고, 이것이 복합적 생활영역(een dubbel levensterrein)이 되어 규칙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Kuyper, 1879: 1067).

이에 따라서, 사회 속에 하나의 복합적 생활영역과 관련하여, 그 영역에서 나타나고 쉽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여러 측면의 관계들에 대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게 된다.

Dit maakt derhalve, dat er in de maatschappij een dubbel(강조 원저자) levensterrein om regel en orde vraagt voor de veelszins ingewikkelde verhoudingen, die er op voorkomen en dus licht in het ongereede kunnen raken.

그런데 상업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이미 규칙이 ‘상법전’(Wetboek van koophandel)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노동의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het terrein van den arbeid)에는 아직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이전에는 이 영역에서 인간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은 관습법으로도 충분했지만, 인간의 의지가 점차 자연에 대하여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교활함이 증대되어 법의 악용과 의무회피가 증가하고, 상이한 국가 간의 접촉이 많아짐에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본다.

위와 같은 논리는, ‘우리의 강령’ 2장에서 암시된, 하나님의 주권이 피조세계 각 영역에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을 통한다는 생각과 맥락이 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2장은 제목이 ‘권위’이며 실제로는 주권에 관한 그의 생각이 제시되고 있는 곳인데, 1절이 ‘주권’, 2절이 ‘그 역사적 전개’로 되어 있다.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각 영역에 흘러들어간다(vloet)고 하면서 여러 영역들을 열거하고, 여러 영역들에서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예시하고 있다. 비록 어떤 영역들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다는 생각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장 2절에는 그러한 역사적 발전의 아이디어가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아이디어가 20장에서 노동문제를 논하면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동이 하나의 영역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노동영역에서 종합적 법전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일방적, 사전적 규율을 배제하는 그의

입장과 일견 상충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노-사 양방 중 어느 한 쪽이 우위를 점하여 다른 쪽을 침해하는 영역을 밝히고, 그 영역에서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그의 논의를 보면, 노동법전이 다루어야 할 문제영역을 정의하기는 하되<sup>22)</sup> 그 규율의 내용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그와 반혁명당이 이 시점에서 노동 분야의 여러 하부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그가 구체적 노동문제들에 대하여 국가가 입법의 형태로 일일이 세세히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식별해 놓고,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일방적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다른 방식’의 내용은 ‘우리의 강령’이 발표된 지 10년 후인 1889년 발표된 그의 논설 ‘수공노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V. 수공노동: 노동회의소

1889년 발표된 이 저작에서 카이퍼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인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 요체는 바로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노동회의소(Kamers van Arbeid)의 조직이다. 이 노동회의소 조직의 제안은 카이퍼가 ‘우리의 강령’에서 아주 간단히 언급했던 ‘골드윈칙’과 ‘협동체적 국가’를 구체화한 것이다.

카이퍼는 그의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먼저 반혁명당이 사회문제 일반을 보는 기본적인 입장을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 대조하여 설명하고, 그 연장선에서 국가의 권능을 논한 다음, 중세의 길드의 역할을 고찰한 후, 그것의 현대적 적용이라 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의 역할과 조직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다.

22) 노동법의 목적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임금, 근무일과 휴일 및 휴식, 병, 노동제해, 재해예방, 교육, 다양한 근로자 지위, 특수 분야의 노동, 노동법원, 노동자의 조직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1. 국가의 권한

우선 카이퍼는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정의한다.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는 계약을 형태를 띠는 데,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용인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모든 계약들이 전제 혹은 포함해야만 하는 특정한 조건을 지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후자가 옳다면 그 귀결로서) 그러한 계약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처벌할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는가?’(Bratt, 1998: 241)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깊이 확신하건대, 정부는 노동관련 사안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지, 설령 그것이 계약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지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의 근거로 카이퍼는 다시 영역주권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영역주권론의 적용은, “입법을 행하는 의회(Staten-General)는 하나의 단일한 영역으로 생각된 국민(het volk als één kring gedacht)을 대표할 뿐이지, 노동과 자본과 같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구분된(onderscheidene) 영역들을 적절히 대표하지는 못 한다”는 논리로 나타난다(Kuyper, 1889: 14,15)<sup>23)</sup>.

## 2. 노동회의소

이와 같이 국가가 노동관련 사안에 대해서 입법의 권능으로 개입할 수 없다면,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앞에서 본 ‘우리의 강령’에서는 카이퍼는 노동자계층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권의 확대를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입법권을 통한 개입에도 한계를 지운 그의 논리상, 선거권의 확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된다. 그 대안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헌법적 기초를 가진(op staatsrechtelijken voet)’ 노동의 조직이다. 카이

23) Bratt eds.(1998)에서는 het volk als één kring gedacht를 ‘the people as one entity’로, de onderscheidene kringen 은 ‘subentity’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gedacht(생각된)의 의미가 빠져있고, subentity는 entity로 번역된 ‘국민’의 하부 단위라는 어감이 강하게 풍기는데 카이퍼가 이 de onderscheidene kringen이란 표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국민이라는 단위에 대한 하부성보다는, 노동과 자본이 서로 구분되고 다른, 그리고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영역들이라는 점으로 보인다.

퍼는 자본은 이미 다수의 상업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형태로 잘 조직되어 있는데 반해 노동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무방비 상태를 지적하면서, 노동회의소(Chambers of Labor)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은, 헌법적 구조의 밖에 조직된 사적인 노동자들의 조직(particuliere werkliedenverenigingen)이 아니라, 정부가 관련된 정책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그 자문을 받는 조직이어야 하고, 동시에 노동자체의 조직 속에 뿌리를 둔 조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규제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방식을 배척하고, 노동자 계층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창출을 중시하는 그의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제도적 틀로서, 카이퍼는 국가기구에 대하여 노동자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통로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그 ‘대표가 의회(특히 지역단위의 하원)라는 단일 통로를 통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일반적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과 병존하면서, 거기에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내부적 조직을 통하여 강한 대표성을 가지고 대변하는, 그리고 그러한 지위가 헌법적 질서로 보장되는 조직을 형성시킨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카이퍼는 노동회의소 아이디어의 역사적인 연원이 되는 길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주장이 중세의 길드로 회귀하자는 복고(復古) 주장을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세에 존재하던 노동자의 조직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파괴한 프랑스 혁명 및 그것을 전후로 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노동자들의 조직 해소라는 잘못된 제도적 변화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무제한의 자유(boundless liberty)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잘못된 생각, 즉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가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자유주의 원칙이 노동계층으로 하여금 인간존재로서의 안정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들을 기계의 부수품(appendix)으로 전락시키며, 계층간의 혐오, 적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그가, 노자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우리의 강령’에서는 ‘노동자들의 의식의 성장, 기계화에 따른 탈숙련화, 인구증가’를 들었던 것에 비하여,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인식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길드의 붕괴는 프랑스 혁명 이래 19세기 전반, 중반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사회구조상의 중요한 변화였으며, 여기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음으로써, 카이퍼는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의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된다<sup>24)</sup>.

그렇다면, 그가 구상하는 노동의 조직화, 노동회의소(Kamers van Arbeid)는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떻게 조직되는 것이었나? 노동회의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본과 대등하게 권력의 여러 수준(중앙 의회, 주(州), 기타)에서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통합적 대표가 가능하도록 다기화(多岐化)된 노동자 계급의 각 부문들을 대표 하는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전국적이고 전반적인 조직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특유의 영역주권론적 입장과 점진주의적 접근방식을 견지한다.

우선 노동자의 조직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는 최소한의 규칙만을 제공하고 그 틀 속에서 노동자들이 조직되면 그들이 스스로 그 조직과 규칙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중세에도 다음과 같은 원리로 길드가 구성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그의 시대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Kuyper, 1889: 21).

국가가 아니라 길드 스스로가 그들의 조직과 규칙을 발전시켰으며, 그것은 자율적이고 전적으로 “그들의 고유 영역에서 주권적”[강조는 원저자]이었다. 집의 건축이 진전되는 정도에 따라, 당국은 그 비계(飛階)를 매번 조금씩 제거해 갔다.

Niet de Overheid, maar de Gilden zelve hebben dan ook zeer autonomisch en geheel “soverein in eigen kring” heur organisatie uitgewerkt en heur wetgeving geregeld. Naarmate de bouw van het Huis vorderde, nam de Overheid telkens iets van haar steiger weg.

카이퍼가 생각하기에, 노동회의소들을 조직함에 있어서 초기에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율은 “회의소들이 지역사회 단위로 진정한 노동자만을 대표해야 한다”는 원칙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원칙에서 출발하여 그는 <표1>에 보인 바와 같이 노동회의소의 조직과 기능이 점진적으로 확대, 심화되어가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우선 지역사회별로 정규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선출을 통해서 지역별로 회의소들을 조직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 지역별 회의소들은 (지역)정부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들 조직이 산업별로 하부조직을 두면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een sort representeerende colleges)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상공회의소와 노동회의소 양자로부터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듣고,

24) 뒤에 언급할 카톨릭의 사회사상문서 ‘레룸 노바룸’(Leo XIII(1891)) 역시 길드의 파괴를 노동자들의 비참상의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그러한 원리의 복원을 그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카이퍼와 차이가 있다.

양자는 상대방이 정부에게 자문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양자가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Raden van geschillen: Councils of Arbitration)를 구성하여 노자간의 갈등하는 사안에 대하여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표1〉 카이퍼의 노동회의소 조직의 구상(‘수공노동’)

발전단계	노동회의소 조직	기능	상공회의소 조직
낮은단계	지역회의소	임의적 자문	이미 현존
중간단계	지역회의소가 산업별 하부조직 결성	공식적 자문	산업별 하부조직
	지역내 대표성 강화	중재위원회 위원 지명	지역내 대표성 강화
높은단계	전국적 일반노동회의소	- 일반적 문제 자문 - 노동법전 상의 문제 협상. 필요한 경우 - 상원(이해관계원)에서 노동의 이해를 대표	전국적 일반상공회의소

그리고 최고의 단계로는 가장 전국적이고 일반화된 형태로 개별적 노동회의소들이 그 대표를 보내어 형성되는 하나의 일반노동회의소(Generale Kamer van Arbeid)를 구성하고, 이 조직이, 같은 원리로 구성된 일반상공회의소(Generale van Koophandel)와 더불어 보다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노자를 전국적으로 대표하는 양 조직은 카이퍼가 제정을 주창했던 노동법전 상의 문제들에 관하여도 협의(saamwerking)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가 원할 경우 그 결과를 정부가 추가적 규정의 제정을 통해 보증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sup>25)</sup>.

25) 노동조합과 노동회의소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의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카이퍼가 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던 시점에서 네델란드의 노동조합 운동은 아직 미미하고 산발적이어서 카이퍼가 노동조합과 노동회의소를 비교하여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검토해보면,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는 단체교섭을 통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진성향을 가질 경우에는 사회주의적 정치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카이퍼가 주창한 노동회의소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권익 추구보다는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공공의 장에서 자본과 구분되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급격한 사회

### 3. 노동회의소의 ‘독립성’과 ‘최상위 대표성’

카이퍼가 제기한 노동회의소 조직의 아이디어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노동의 독립성과, 전국적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카이퍼는 당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자본가가 주축이 되고 노동자가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회의소 조직의 구상을 배격하였다(Kuyper, 1889: 30).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조직은, 자본과 노동 각각에 기초한 조직이다.

Neen, de Organisatie, waarop we af hebben te gaan, is een organisatie op eigen voet, zoowel van het Kapitaal als van den Arbeid.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은 노동대표 조직의 독립성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원리는 그 당시 유럽에서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다른 기독교, 특히 카톨릭의 사회사상과 대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카톨릭의 사회사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레오 13세의 회칙(回勅) 레움 노바룸(Leo XIII(1891))에는 노동자, 자본가, 교회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여러 조직들을 구성하여 노동자의 교화, 노동조건 개선, 상호공제, 갈등의 조정 등을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조직 안에서 노동과 자본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이퍼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무용하다고 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sup>26)</sup>,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이익이 대립적이고 완전히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 각자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법적인 틀 속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독일식 모델을, 권위주의적 국가가 복지체계를 구성하여 시혜를 베풀으로써 노동자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상정하고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운동이 강했던 독일에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상했던 독일식 모델은 실업, 노령, 질병, 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

변혁 추구의 도구로 상정하지는 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에 카이퍼가 총리로 재임하던 기간 중 발생한 급진적 노동운동 투쟁이었던 1903년의 ‘철도 파업’에 그가 어떤 논리와 원칙으로 대처했는가를 연구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 그의 유명한 연설 “기독교와 사회문제”도 바로 기독교적 노자협동체의 성격을 가진 파트리모니엄이 개최한 ‘기독교사회회의’에서 행한 것이다.

위험들에 대해서 사회보험체계를 구성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면서 동시에 그 집행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와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는 이같이 국가가 노동문제의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노동자가 수동적 수혜자로서 위치하는 방식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sup>27)</sup>.

그리고 노동관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 즉 노동법전에서 규정되어야 할 문제들은 국가에 의해서 위로부터 부과되면 잘못된 해결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식은 자본가와 노동자 양자의 협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그 ‘협력’의 길이라는 것은 개별 사업장에서의 교섭이나 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조직된 노조협조 조직이 아니라, 지역별, 직능별 혹은 전국적 수준에서의 노동자의 대표조직과 자본가의 대표 조직, 양자의 ‘조직 대(對) 조직’ 협의를 통한 것임은 그의 논의를 통해서 자명하다 하겠다.

둘째로 주목할 만한 요소는 양원제 체제하에서의 상원을 지방정부가 선출하는 당시 체제를 비판하고, 상원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집단들로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이것을 그는 ‘이해관계원’(Kamer van Belangen)이라고 부르면서 대학, 대도시, 상업, 산업, 농업, 노동, 교회, 학교, 자선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회의소를 조직하는 것은 이러한 이상(理想)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카이퍼의 구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하나의 단일한 영역으로 상정된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별도로 사회 안의 여러 다양한 영역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조직을 헌법적인 틀 속에서 창출하여, 그 조직들의 협조를 통해 갈등사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아이디어를 정치적으로 최상위 수준에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가 노동자의 조직에 있어서 중시하고 있던 이런 요소들은, ‘수공노동’ 발표로부터 8년 후인 1897년 그가 의회에서 한 연설(Wetsonwerp tot oprichting van Kamers van Arbeid, Vergadering van 23 Februari 1897, in Kuyper, *Parlementaire Redevoeringen Deel 1*)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당시 네덜란드의 온건 자유주의파 정부는 1887년 벨기에에서 제정된 산업노동회의소(Boards of Industry and Labour)

27) 이같은 비스마르크의 구상이 독일에서도 그대로 관철된 것은 아니었으며, 노동자들의 자주, 자결권 확보 노력이 사회복지체계에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갑(2009)을 참조하라.

와 같은 제도를 ‘노동회의소(Kamers van Arbeid)’라는 명칭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벨기에의 산업노동회의소는 왕의 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한 지역에 설치되어 그곳에서만 활동하며, 여러 산업의 고용자와 피용자 대표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산업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나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그 유용성이 제한된 조직이었다(Kossmann, 1978: 501). 네덜란드 의회에 제출된 정부의 법안은 이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고, 따라서 명칭은 같지만 카이퍼가 ‘수공노동’에서 제시한 노동회의소의 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카이퍼는 이 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 핵심으로 ‘이익의 대표(vertegenwoordiging van de belangen)’라는 원칙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이익의 대표’가 정치적 ‘이념의 대표’와 더불어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uyper, 1897: 143).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익에 따라 결속된, 또 하나의 대표, 즉 국가가 정신뿐 아니라 육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육체, 국가의 물질적 측면, 이익의 총체도 자신의 권리를 얻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표도 있어야 한다.

...zoo ook zoude zijn eene andere vertegenwoordiging, die zich niet naar politiek ideeën, maar naar de belangen groept, er mee rekenende, dat de Staat niet maar een ziel, maar ook een lichaam heeft, en achtende, dat ook dat lichaam, die stoffelijke zijde van het staatsleven, dat geheel van belangen, als zoodanig tot zijn recht moet komen.

이러한 중심적 원리로부터 카이퍼는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회의소’ 조직에 대한 정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이견(異見)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안은 회의소 조직 내에 노동자 대표와 자본가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고, 각각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카이퍼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노동과 자본을 별도의 영역 또는 이해관계로 파악하였고, 그 각각의 영역의 이해가 공식적 구조를 통하여 대표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동을 대표하는 조직이 단순한 정부에 대한 자문만이 아니라, 그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특정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 방식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sup>28)</sup> 벨기에, 오스트리아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그들 나라에서는 노동을 대표하는 조직이 의회 의원을 지명하는 권한을 보

유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카이퍼도 노동을 대표하는 조직에게 의회 등 국가기구의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국가적 수준에서의 대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회의소 조직이, 특정 지역에만 설치될 것이 아니라 전국적 조직이어야 함을 역설했다. 즉,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나, 노동자 계급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나 전국적 조직이 아니면 안된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이상에서 본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유하고, 국가 정치의 최상위 수준에서 대표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개념은 당대 네덜란드의 다른 정치세력들이나 사회사상과 구분되는 카이퍼의 뚜렷한 특징이었으며, 그 근거에는 그의 영역주권론적 사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I. 요약과 함의

이상에서 카이퍼가 노동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던가를, 관련된 그의 세 가지 저작 혹은 연설문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가 제시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중요요소인 영역주권론이 노동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과 대안 제시에 중요한 틀로 작용하였음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자본주의적 관계 속에서의 노동, 노동자들의 삶과 그 조건, 그들의 이해관계<sup>28)</sup>를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들어가는 여러 영역이 존재하며, 그 영역들은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나온다고 보았던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근대로 들어오면서 자유방임 사상에 따라 이루어진 길드의 파괴가 노동자들을 보호가 없는 상태로 몰아넣은 것으로 보았지만, 중세적 길드 질서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

28) ‘수공노동’에서는,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회의소와 상공회의소가 중재위원회에 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9) 이것을 카이퍼는 ‘노동세계’(arbeidswereld)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예컨대 Kuyper, Parlementaire Redevoeringen Deel 1의 140, 143쪽

으며, 그 까닭 중 중요한 것이 노동자와 고용주의 이익의 분리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관습이나 관례가 아니라,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노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과 분리된 노동회의소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둘째, 그의 영역주권론의 중요한 요소인 ‘국가의 한정된 권능’이라는 개념은 노동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하향적, 설계주의적, 국가 개입 방식이 아닌 상향적, 제도적, 계급간 자발적 타협의 방식을 선호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국가가 행정이나 입법의 권능으로 노자간의 갈등영역에 대하여 사전적인 답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으며, 국가주도의 강제적, 시혜적 복지제도(‘독일 모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

셋째, 그의 영역주권론에 따르면 국가는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각 영역이 그 고유의 주권을 발휘하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의 기능을, 대립하는 두 계급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는 대표(vertegenwoordiging)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의 균형 확보를 위해 투표권의 확대를 주창했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민주적 선출절차에 기초한 노동회의소를 조직하여 그들의 이해를 지역 및 전국적 차원에서 대표하게 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원을, 노동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원’으로 재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이퍼의 ‘사고’는 당대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간단히 검토함으로써 마무리한다.

카이퍼가 제시한 종합적 노동법진과, 헌법적 지위를 가진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적, 상향적 조직 원리에 기초한 노동회의소라는 아이디어는 네덜란드의 현실정치에서 당대에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카이퍼의 총리로서의 집권(1901~1905) 전 자유주의 정권은 독일 모델을 본뜬 복지체계를 일부 도입하여, 그가 집권했을 때에는 이미 그것이 ‘잘 조직된 인기 있는 체제(Kossmann)’가 되어 있어서 그의 이상을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의 집권기에는 1903년 네덜란드 역사상 미증유의 무정부 성향의 전국적 파업이 일어나 그에 대한 대응과 사후처리에 매달려야 했다. 또한 그 밖의 여러 정치 사안들로 인하여, 그가 큰 의욕을 갖고 있었던 노동 및 복지관련 입법안들은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의회에 상정되지 못하였으며 그의 아이디어는 반혁명당 내에서도 전적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카이퍼가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한 사고의 틀은 네덜란드 역사에 중요한 유산으로 남았으며, 우리에게도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첫째, 본문에서 언급한 자유주의 정부에 의해 1897년 도입된 노동회의소는 그 후 반혁명당의, 카이퍼의 이념을 계승한, 탈마(Talma)에 의해 1913년 노동이사회(Labour Boards)로, 매우 제한적이지만, 발전하였고, 그 후에도 1차 대전 이전 반혁명당과 카톨릭당의 연정을 통하여 고등노동협의회(Hooge Raad van Arbeid)등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노자간의 협의 및 그에 따른 시행을 담당하는 여러 기구들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1, 2차 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에 네덜란드에 강력한 코포라티즘 체제가 형성되는 기초가 되었다(Wintle, 2000: 277; van Zanden and van Riel, 2004: 247 ff).

둘째, 그의 노동과 자본을 대표하는 조직에 의한 전국적 수준에서의 대표와 협상이라는 아이디어는, 2차 대전 이후에도, 노동문제 또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한 나라의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북구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체제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대표조직이 결성되는 방식이나 두 집단의 이해가 조정되는 방식은 카이퍼의 아이디어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노자 양자의 대표조직에 의한 전국수준의 협상이 제도화되고 국가는 그 결과를 수용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는 형태의 자본주의 운용방식(네덜란드의 이른바 ‘폴더모델’이 그 예라 할 수 있다)은, 시장중심-자유방임을 이념형으로 하는 영미식 자본주의와, 국가의 재분배 및 기업 내에서의 노사 공동결정(Mitbestimmung)을 중요요소로 하는 독일형 자본주의와는 구분되는 모델이며, 카이퍼가 제시한 ‘균형과 대표’의 원리와 친화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의 사상에 기초한 전통(정당, 이념, 정책)이 2차 대전 후 이러한 체제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더 나아가 영역주권론적 사고는 인간 공동체가 풀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시장이나 국가나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990년대 초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촉발된 자본주의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국가도 시장도 만능의 답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그러한 현시점에서, 인간 생활의 다양한 영역별로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고유의 주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 맥락에서 국가와 경제의 조직 원

리를 모색한 카이퍼의 사고는, 인간 공동체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각각 차별화된 ‘적정한 의사결정의 단위와 방식’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예컨대, ‘거버넌스’나 ‘사회적 기업’이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중 전자는 정책의 구상과 집행에 있어서 관련된 당사자 대표들, 시민사회, 정부의 협조체제를 의미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고, 후자는 이윤추구기업도 국가의 재분배 기구도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협조체제와 조직이 다양한 구체적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찾는 이론적 연구와 구체적 실천에 대하여 영역주권론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현수(2004). “일반은혜론 소고: 카이퍼, 스틸더, 반틸 그리고 기독교학문연구회에  
서의 논의들”. 『신앙과 학문』 9(2). 199-240.
- 민중기(1997). “누가 기독교 정치인인가: 정치선교사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4). 153-177.
- 박근갑(2009) 『복지국가 만들기 -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기원』,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정광덕(2000).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회론과 사회윤리”. 한국개혁신학회 제27차 정  
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 정성구(201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서울. 킹덤북스.
- 주경철(2003). 『네덜란드』. 서울. 산처럼.
- 차영배(1985) “카이퍼의 생애와 신학의 문제점”, 『신학지남』 205, 34-47.
- Bolt, James. (Ed.) (2001). *A Free Church , A Holy Nation: Abraham Kuyper's  
American Public Theology*.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Bratt, James (Ed.) (1998). *Abraham Kuyper -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s:  
Eerdsmans Publishing Company.
- De Gaay Fortman (Eds.)(1956). *Architectonische critiek Fragmentie uit de  
sociaal-politieke geschriften van Dr. A. Kuyper*. Paris, Amsterdam: Drukkerij  
Meiner N.V. Wormerveer en Amsterdam.
- Hansen, E. and P.A.Prosper, Jr.(1976). “Relig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Dutch Trade Union Movement 1872-1914.” *Histoire Sociale - Social History*  
9. 357-383.
- Heslam, P.S.(1998). *Creating a Christiam Worldview: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smans Publishing Company.
- Koch, J. (2006). *Abraham Kuyper een biografie*. Utrecht: Boom.
- Kossmann, E.H. (1978). *The Low Countries: 1780 - 19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uyper, A. (1879). *Ons Program*. Amsterdam: J.H. Kryut.
- Kuyper, A. (1880). *Sovereiniteit in Eigen Kring: Rede ter Inwijding van der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J.H. Kryut, Translated as “Sphere Sovereignty”  
in: Bratt, D.(eds) (1998).
- Kuyper, A. (1889). *Handenarbeid*. Amsterdam: J.A. Wormser. Translated as  
“Manual Labor” in: Bratt, D.(eds) (1998).
- Kuyper, A. (1897) “Wetsontwerp tot oprichting van Kamers van Arbeit, Vergadering  
van 23 Februari 1897” in: Kuyper, A. *Parlementaire Redevoeringen Deel 1  
Kameradvizen*.
- Kuyper, A. (1891). *Het Sociale Vraagstuk en de Christelijke Religie*. Amsterdam.  
Skillen, J. W. (trans.) (1991). *The Problem of Pover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조계광 역(2005). 『기독교와 사회문제』. 서울. 생명의 말씀사.

- Kuyper, A.(1917).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Kampen: J.H.Kok.
- Kuyper, A.(2007). *Lectures on Calvinism*. New York: Cosimo Classics.
- Kuyper, A. (Publishing year unknown) *Parlementaire Redevoeringen Deel 1 Kameradvizen*, Amsterdam: van Holkema &Warendorf.
- Langley, M.R. (1984) *Practice of Political Spirituality: Episodes from the Public Career of Abraham Kuyper, 1879-1918*. Preiss: Paideia.
- Leo XIII(1891) *Rerum Novarum*.  
([http://www.vatican.va/holy\\_father/leo\\_xiii/encyclicals/documents/hf\\_l-xiii\\_enc\\_15051891\\_rerum-novarum\\_en.html](http://www.vatican.va/holy_father/leo_xiii/encyclicals/documents/hf_l-xiii_enc_15051891_rerum-novarum_en.html) ) accessed on 21 Jun 2011.
- Lugo, L. E. (Ed.) (2000). *Religion, Pluralsim, and Public Life..* Grand Rapids: Eerdsman's Publishing Company.
- McGoldrick, J. E. (2000). *God's Renaissance Man: Abraham Kuyper*, Evangelical Press.
- Skillen, J. W. (1991). *The Problem of Pover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Skillen, J. W. and R.M.,McCarthy (1991). *Political Order and the Plural Structure of Society*, Atlanta: Scholars Press.
- Vanden Berg, F. (1978). *Abraham Kuyper - a Biography*. St Catharines: Paideia Press.
- van Zanden, J. L. and A. van Riel (2004). *The Structure of Inheritance: The Dutch Economy in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ranslated by van Reil and van Zanden (2000). from *Nederland, 1780-1914: Staat, instituties en economische ontwikkeling*. Uitgeverij Balans.
- Wintle, M. (2000). *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Netherlands 1800-19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Abraham Kuyper's View on Labor Problem

Myung-Heon Lee(University of Incheon)

This article studies Kuyper's view on the labor problem and his proposals for its solution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his concept of sphere sovereignty and his view on this particular social problem. He recognized labor, laborers' living, and their interest as a distinct sphere, which demands a separate code and organizations to represent laborer's own interest. The concept of State's limited authority made him prefer bottom-up, institutional, and voluntary negotiation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 As concrete measure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which he advocates as a mean to realize the function of the State to resolve a conflict situation between different spheres, he suggested to organize local 'chambers of labor' and a national general chamber of labor and to replace the conventional first chamber with 'chambers of interests' where various groups of interests were to be represented. Though not realized in his time, Kuyper's idea can be seen as a forerunner of the democratic corporatism, the concrete forms of which can be found in postwar north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and Sweden.

Key Words: Kuyper, labor problem, sphere sovereignty, chambers of labor, corporatism

